



“에너지진단 교육, 25년의 축적된 노하우 전수”

에너지진단 의무화시행을 앞두고 에너지진단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2006년도 에너지진단사 연수교육과정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에너지관리공단도 올해는 현장실무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과 강사선정에 고심했다고 밝혔다. 공단 홍보교육실 유병배 대리를 만났다.

■ 박정미 기자(psn0304@energycenter.co.kr)

유 대리는 “지난해 교육과정 후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특히 현장실무능력과 노하우의 구체적인 전수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아 강사 등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에너지진단 의무화를 규정한 에너지융합리화법 시행령과 규칙이 입법예고됐다. 매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체는 3년(부분진단) 또는 5년(전체진단)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의 골자다. 게다가 그동안 진단을 받고 싶어도 비용상의 부담으로 미뤄왔던 중소기업들은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받게 돼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정부는 진단의무화가 실시되면 연간 160만 TOE의 에너지를 절약해 32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은 그동안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인 진단유도를 실시해 온 것과 비교해 상당한 산업체 에너지절약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진단의무화로 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진단사다.

연료 또는 전력의 발생, 수송, 사용설비 전반에 대한 에너지사용실태를 검토하고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단사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진단인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진단사 검정 시험 및 관련 교육을 주관해 민간 진단사를 양성하고 있다.

자격증을 받게되면 공단 에너지전문가그룹에 등록되고, 자발적협약(VA)기술지원단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에너지진단의무화 입법예고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듯 진단사 교육신청자도 작년보다 두 배로 많아졌다.

에너지관리공단 유병배 대리는 “3월 말 현재까지 신청접수를 받아본 결과 오는 4월 17일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 될 에너지진단사 연수교육에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진단사 연수는 에너지다소비업체, ESCO 등 에너지관리 업무담당자들이 주로 신청해왔는데 특별한 자격은 없었다. 그러나 검정시험은 관련자격증보유자, 현업 종사경력 등의 자격요건이 있다.

교육과정은 열진단과 전기진단으로 구성되며 필수이론(열, 전기 1차 과정)을 바탕으로 Data 수집분석, 경제성분석(열, 전기 2차 과정) 등 현업에 필요한 진단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특히 올해는 진단의무화시대에 대응해 ‘고유가시대 에너지관리진단 25년의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유 대리는 “지난해 교육과정 후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특히 현장실무능력과 노하우의 구체적인 전수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아 강사 등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진단사 검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진단사 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총 116명. 이들은 주로 에너지다소비사업체나 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다.

공단은 외주진단을 수탁할 때 에너지진단사를 보유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인 진단사 양성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유 대리는 진단사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ESCO등록여건에 에너지진단사 자격보유자를 반영할 예정이며 자격증을 국가공인화하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